

News & News

##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학년 구강검진 실시 서울시 교육청 “방문검진 원칙·출장검진 허용 방안도 강구” / 치협·유기홍 의원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성료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오는 2007년부터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현행 구강검진수가 조정 등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이해 당사자인 치과의사회, 교육청, 보건교사회가 협의해 추진기로 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치협이 공동주최한 학생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월 29일 서울교통문화교육원에서 안성모 협회장, 김재영 부회장, 이수백 치정회 상임부회장, 박영섭 관악구 치과의사회 회장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학생구강검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고남호 서울시 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장은 학생 구강검진 향후 대책과 관련, “현행 규정상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는 초등학생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구강 정기검진의 경우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일괄 계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추진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또 “의무적인 것이 아닌 초등학생 1학년과 4학년 외의 다른 학년도 매년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기로 지난 9월 서울시 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방문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출장검진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과장은 “검진수가를 조정하고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마련키 위해 치과의사회, 교육청, 보건교사회가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마련, 2007년도부터 이 같은 사항을 적용 하겠다”고 밝히고 “교육청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검진대상자에 학생이 포함돼 공단에서 검진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방안의 법가정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 과장의 발언은 대상이 초등학생으로만 한정은 됐지만, 의무 구강 검진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단체 계약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 변화도 보이고 있어 치과의사가 배제된 현행 구강검진 문제점이 다소 해소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매우 낮은 검진비가 책정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몰릴 경우 개원가에서 오히려 일반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단체 계약도 법령개정 사항이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구강검진 방식의 모순점을 반영하듯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이 쏟아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학생구강검진이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만 의무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조기발견 초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고 결국 학생구강건강 수준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구강검진기관을 소수의 의과 건강검진 전문기관만을 지정하는 양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결국 이들 기관들이 치과의사 1명 정도를 채용해 다수의 학생을 검진함으로써 당초 내원검진의 취지인 내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전 이사는 ▲학생구강검진을 전 학년이 매년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환원하고 ▲학생구강검진기관은 학생 본인이 원하는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며 ▲매우 낮게 책정돼 있는 구강 검진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ews & News

## “허가내용과 다른 광고 할 수 없다” 무통·무마취·무출혈 등 광고 불가...위반시 행정처분 / 식약청, 레이저기기 과대광고 관련 해석

최근 일부 레이저기기와 관련한 과대광고 문제로 인해 치과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허가내용과 다르게 광고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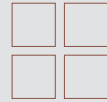
식약청은 최근 치협이 질의한 일부 레이저기기 사용과 관련한 과대광고 여부에 대해 모든 의료기기는 품목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P사의 레이저기기는 ‘방사되는 광에너지(레이저)를 이용해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수술시 사용하는 레이저 기구’ 및 레이저를 이용한 환자의 구강 안의 연조직, 경조직 등의 절삭, 제거, 절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과용 레이저 기구’의 사용목적으로 수입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제품이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방사되는 광에너지(레이저)를 피부에 쬐어 사용하는 기구인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와 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로써 현재 치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치과용 레이저기기는 연조직, 경조직 등의 절삭, 제거, 절개 등을 목적으로 허가돼 사실상 무통·무마취·무출혈 등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모든 의료기기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무통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려면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과대광고여부 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치협 윤리위는 레이저기기 관련 과대광고로 물의를 빚은 해당 회원들의 소명서와 재신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11명의 해당회원 중 8명을 관계기관에 회부토록 결정한 바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1년이상 유예 건의 “환자 기본적 인권 침해 등 위헌소지 내포” / 치협 등 6개 의약계 단체

치협 등 의약계 6개 단체는 올해 1월부터 진료내역을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1년 이상 유예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의약단체는 공동 건의서를 통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변경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환자 진료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기밀누설금지), 제20조(기록열람등) 및 건강보험법 1조(목적), 12조(보험자)를 위반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여러 가지 법률적 위헌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서에서는 또 “일선 의료기관의 여건상 급여 내역 이외에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비급여 내역을 금년 1월부터의 분량을 소급해 산

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동 사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법률적 검토기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건의서에서는 아울러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시행에 앞서 프로그램 개발과 법률적 검토기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재차 건의한다”며 “의약단체의 간곡한 건의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동 제도가 착오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 건의서에는 치협 외에도 의협(회장 장동익), 한의협(회장 엄종희), 병협(회장 김철수), 약사회(회장 원희목), 간협(회장 김조자) 등 5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 효율적 선거 개선 방안 “찬반논쟁 뜨거웠다” 대의원제·선거인단체·직선제 등 의견 팽팽 / 치협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성료

치협 회장 선거를 기존 대의원제에서도 선거인단체도나 직선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대두됐다. 그러나 의료인 단체의 특성을 고려, 대의원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치협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위원장 홍예표)는 10월 27일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 선거제도에 관심 있는 치과계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코엑스 신관 아셈홀에서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에는 ▲박영채 회원(서울지부 영등포구회)의 현행 대의원제도 개선 ▲한문성 회원(서울지부 광진구회)의 선거인단체도 도입 ▲김용진 집행위원장(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도입하자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박영채 회원은 기존 대의원제도를 존속시키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원은 “직선제의 경우 자칫 회원들의 투표 참여를 저하와 선거비용 증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현재 대의원제도는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만큼, 기존 대의원제도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인단체도 발표에 대해 한문성 회원은 “운영방법에 따라 직선제형(미국식 선거인단체도)과 간선제형(통일주체국민회의형)이 있다”면서 “지부별 인원수, 연령, 성별, 등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미국식 선거인단체도 도입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직선제를 도입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대의원제도 자체는 민주적인 제도이나 선거와 관련해서는 필연적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선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직선제 방안으로 인터넷을 통한 투표, 투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 선거 공영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

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16면 참조).

이어 벌어진 토론 시간에는 치과계 인사 6명 비롯한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가 초청된 가운데 그야말로 회장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갈리면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권재신 회장(서울지부 용산구회 회장)은 “현행 대의원제도를 유지하고 점차 직선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차후 선거인단 인원을 5배 확대, 1000여명 선으로 늘리는 선거인단 제도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혜령 부회장(대한여자치과의사회)은 “여성 회원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적 여성 부회장 도입과 함께 여성 이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영남 회원(서울지부 동대문구회)은 “현행 대의원제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지만 직선제를 도입한다면 선거 비용도 줄고, 선거분위기도 띄우는 측면에서 분회별 총회에서 지부 및 치협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석천 회원(서울지부 동대문구회)은 “직선제는 선거비용과 인기 영합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대의원제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상복 회장(서울지부 도봉구회 회장)은 선거인단체도가 선거비용이나 후보 검증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며, 최동훈 회원(서울지부 중구구회)은 러닝메이트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특별 토론자로 참석한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는 대한의사협회의 경험으로 볼 때 대의원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대의원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현 집행부는 선거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선거 개선의 장으로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한편 홍예표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잘 받아들여,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를 별도로 실시 후 차기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 개선안을 집행부 상정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